

주간 통일정세

2014-48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 북한, 박 대통령 인권 발언 원색 비난...“입조심하라”(12/1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중앙방송)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문제를 비판한 데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함.
 - 조평통 대변인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박근혜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제 체면을 스스로 깎는 부질없는 녀두리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우리가 누차 권고한 바와 같이 화근으로 되고 있는 그 입부터 조심하는 것이 북남관계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박근혜정부 통일론 "실현될 수 없는 개꿈"(12/1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2일 서기국 보도에서 "온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 배경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니 뭐니 하면서 체제대결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자멸행위"라고 경고함.
 - 조평통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내년에 발표할 통일현장,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 구상을 열거하며 '체제통일' 시도로 규정함.
 - 이어 조평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개꿈에 불과하다"며 "체제 대결의 불순한 놀음과 허황한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 지속할 것"(1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12월 17일)를 맞아 발표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 원수님(김정은)의 사상이고 결심"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보고서는 "박근혜 정권이 떠드는 통일은 도이칠란드(독일) 방식을 본 딴 흡수통일로서 본질에 있어서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대결론"이라며 정부의 통일론을 비난함.
-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통일헌장과 관련, "지금 북남관계가 전진하지 못하고 통일운동이 곡절을 겪고 있는 것은 통일헌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조선 당국에 애초에 북남관계 문제나 통일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결단을 내릴 용단도 주권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한 인권법 제정 또 비난... "남북관계 파국" (1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인권의 간판을 단 대결악법조작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체를 해치고 천만 국민의 일심단결을 허물기 위한 인권모략"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해와 악의에 찬 비방, 범죄적인 뼈라 살포를 범화함으로써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심화하고 종당에는 전쟁밖에 몰아올 것이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비난함.
 - 이어 신문은 "괴뢰 패당의 동족대결죄악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계산될 것이며 매국반역의 무리들에게는 준엄한 징벌의 철추가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국민통일방송은 심리모략전... 남북관계 악영향" (12/11,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논평에서 "괴뢰패당의 통일방송 조작 놀음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이며 북남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국민통일방송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편승한 심리모략전의 일환"이라며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모략 자료들을 우리에게 들이밀어 그 누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존엄 높은 체체를 모독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또 북한의 TV와 라디오 방송을 관장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이날 남한의 또다른 대북 매체인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방송'이 조선중앙TV 영상을 '왜곡 중계'하고 있다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11일 보도함.

- 조선신보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하면 좋을 것"(12/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분산 개최를 승인한 것을 거론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개최 방안을 제안함.
- 신보는 12일 '올림픽 공동주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적용되는 IOC의 결정이 올림픽 개최의 재정적 부담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이 기회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설비가 세계적인 수준인 마식령스키장을 이용하면 어떨까"라고 제시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동계훈련 최고수준...AN-2기 공수훈련 20여배 증가(12/1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0일 보도를 통해 군의 한 소식통이 "11월 초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국지도발 위협을 치밀하게 감시 추적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11월 중순부터 AN-2기를 이용한 특수부대 공수강하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훈련 빈도는 예년보다 20여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이어 뉴스는 소식통이 "포병 실사격훈련도 대폭 증가했으며 전체 전방군단의 도하공격 훈련도 이례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여단급 기계화부대의 전방지역 돌파 시범식 훈련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보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관광 2개월내 재개 준비" 현대아산 점검단 방북(1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9일 보도를 통해 금강산·개성관광 독점 사업권자인 현대아산 실무진이 9일 겨울철 시설점검을 위해 금강산으로 향했으며, 오전 강원도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로 방북, 2박3일 간 현지 점검을 마친 뒤 11일 귀환할 예정이라고 전함.
 - 뉴스는 현대아산 관계자가 "올해 2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현지 시설을 운영한 뒤 줄곧 비워뒀는데 보일러의 물빼기 작업을 포함해 월동 시설 점검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현대아산 사장 방북신청...김정일 3주기 추모화환 전달(12/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2일 보도를 통해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 등 임직원 8명이 방북 신청을 해 통일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현대아산이 밝혔음을 전함.
 - 뉴스는 조 사장 일행이 16일 개성을 방문해 현대 개성사업소에서 북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추모화환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함.
 - 현대아산은 "선대회장들부터 현정은 회장까지 이어온 인연과 예로부터 3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서를 고려해 추모화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는 뉴스를 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남한 對北 매체들(대일리NK, OTV 등 4곳)의 '국민통일방송' 설립 추진에 대해 "북남 대결을 격화시키고 反北 인권모략 소동을 통해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괴뢰패당의 책동"이라고 비난(12.8, 평양방송)
- 유엔 北韓인권결의안·北인권법·국민통일방송 등을 거론 '괴뢰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인권 심리모략책동이 절절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하며 '공화국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이 된 불패의 강국'이라고 강조(12.9, 중앙통신·노동신문)
-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사건' 관련 '집권자와 인연을 맺고 있는 몇 명의 권력자들이 남조선 정계를 쥐락펴락 하고 있는 사실은 씩을 대로 씩은 청와대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12.9, 중앙통신)
- 남한의 '北 인권법' 제정 관련 '北 인권법은 불순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결악법'이라며 그것이 제정될 경우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 수 없는 최악의 파국상태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난(12.10, 노동신문)
- 北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조국통일3대헌장을 '완벽하고 공명정대한 통일대강,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헌장'이라며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독일식 흡수통일로서 반평화적·반통일적 대결론'이라고 비난(12.12, 중앙통신)
- 남한에서 "인권유린 만행들이 계속 감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北인권문제 제기'는 "신성한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12.14,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CIA 고문' 비난... "안보리는 미국부터 처벌해야"(12/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 인권문제를 논의하려면 몇몇 인간쓰레기들이 꾸며낸 허구적인 우리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신작칙(以身作則, 솔선수범)의 견지에서 상임이사국인 미국에서 자체 폭로된 세기적인 특대형 인권유린행위부터 즉시 문제시하고 책임있는 자들을 법정에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물고문을 비롯한 CIA 고문 실태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중세기적 고문행위들이 미국 대통령의 승인과 비호 밑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감행됐으니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초, 인권 불모지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서방 인권 공세 속에 '영화의 역할 강조'(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영화 혁명의 길에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혁명 과정에서 근로자 교양의 수단으로 영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특히 신문은 친미 교육을 받은 주인공이 한국전쟁을 겪으며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내용의 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치켜세우며 미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
 - 신문은 먼저 "오늘날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은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위협과 함께 대조선 인권 광란극까지 조작하면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어찌 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미국은 인권말살제국"...미국에 인권역공(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살인행위가 정당화되는 암흑사회'라는 논설에서 미국 미주리주의 퍼거슨 시가 흑인 청년을 총격해 사망하게 한 백인 경찰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을 '인권말살제국'이라고 비난함.
 - 논설은 "내외 여론은 미국의 극악한 인종차별정책과 인권유린행위에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 있다"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러시아 외무성, 이란 외무성 등의 비판 여론을 자세히 소개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투표 전 미국 압력 행사"(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논평에서 "인권결의안 표결이 박두했을 때 일부 나라 대표가 우리를 찾아왔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미국이 자국의 내부 문제를 국제화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대표들은 '조선 문제가 정치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경제 원조에 목매인 정부의 지시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했다"고 강조함.
 - 신문은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유엔의 '간관'을 이용했다면서 "우리의 '인권문제'를 부각시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라고 역설함.

- 북한 "미국 '북한위협론'은 중국 견제 위한 술책"(12/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주변대국을 제압하려는 과렴치한 기만술책'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내정자의 '북한 위협'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주변대국을 제압하기 위한 한갓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힘.
 - 논평은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저들에게 도전하는 잠재적 적수들, 짝어 말한다면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견제하고 압박하는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한 "인권 압박 '핵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12/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의 범죄적 진상'이란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미국이 인권문제를 '조작'해 사회주의를 붕괴하려 한다며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가 그 꿈이 개꿈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힘.
 - 논평원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거짓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이는 '북한 무력 침공'에 대해 합법적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압살전략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 이어 논평원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의 이름을 빌려 공화국을 압살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범죄자들을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으로 단호히 쓸어버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한, 잔류 일본인·일본인처 면회 제안…일본 거절"(12/11, 교도통신)
 - 북한이 전후 북한에 남은 '잔류 일본인'과 재일 조선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인 배우자('북송 일본인 처<妻>')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절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올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협의 때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본 정부 대표단에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 처 면회를 제안했다고 북수의 북일 관계 소식통이 밝힘.
 - 북한은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 처 가운데 평양에 거주하는 등 주소가 확인된 10여 명을 북일 협의의 시작일인 10월 28일 별도의 장소에 대기시키고서 일본 측에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일본 대표단은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싶다"며 거절했다고 통신은 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북한 풍계리, 핵실험 임박 징후 없어"(12/10, 38노스)
 - '38노스'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풍계리 핵실험장 내에서는 특이한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美 퍼거슨市 사태(인종차별 시위) 관련 러시아 외무성 등 비판을 전하며 "인권유린 왕초인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인권재판관, 인권문제에 대해 시비질하는 것은 가소로운 행위"라고 조소(12.8,평양방송)
- 北 외무성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12.9), 미국이 北인권문제를 UN 안보리 상정을 추진하는 것 관련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안보이사회에 끌고 가는 것은 그것을 구실로 군사적 침략의 명분을 만들어내자는데 속심이 있다고 비난(12.9,중앙통신)
- 김영남, 12월 9일 작별 방문한 駐北 러시아 대사와 담화(12.9,중앙통신·평양방송)
- 駐北 쿠바대사, 12월 9일 自國 '혁명무력절' 58돌 즈음 오금철(軍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초대한 가운데 연회 마련(12.9,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이 '北 위협' 이유로 남한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저들의 도발적 정체를 덮기 위한 술책'이며 '남조선에 미사일 방위체계를 구축하여 핵전쟁의 불집을 터트리기 위한 호전광의 전쟁타령'이라고 비난(12.10,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노동당 중앙총, 12월 10일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중앙총 앞으로 '총선 승리 및 대통령 被選' 축전 발송(12.11,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2월 11일 駐北 체코 대사(밀란 흐제이) 신임장 접수(12.11,중앙통신·중앙방송)
- 라오스 주석, 12월 4일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라오스 창건' 39돌 즈음 보내준 축전에 대해 답전(12.12,중앙방송)
- 일본의 美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위안부 강제연행' 부분 수정요구에 대해 '역사를 우롱하고 역사에 도전하는 뻔뻔스러운 추태'라며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의 역사왜곡 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비난(12.13,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일 사망(12.17) 3주기 즈음 인민내무군·청년전위들의 웅변·맹세모임, 12월 14일 어은혁명사적지에서 강필훈(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및 인민보안부 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2.14,중앙통신·중앙방송)
- 불법 입북(중국 단둥→압록강건너 입북) 미국인(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스, 29세), 12월 14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입북 경위,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영향과 지배 강요·인권유린 등 맹비난 및 북한 식 사회주의' 찬양(12.14,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모범군인가족 앞에서 연설...아내 역할 강조(1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모범군인가족대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이번 대회를 직접 맡기하고 '군인가족들은 총 잡은 남편들의 믿음직한 부사수가 되자'라는 제목의 서한을 대회 앞으로 보냈다고 전함.
 - 통신은 공연 관람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량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등이 배석했다고 보도함.

- 북한 김정은, 잠수함부대 시찰..."내년 해군력 강화"(12/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해군 잠수함부대인 '조선인민군 제189군 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13일 김 제1위원장의 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오일정·한광상 당 부장이 동행했으며 해군사령관인 김명식 상장, 대연합부대 정치위원 박태수 해군소장 등이 이들을 맞이함.
 - 김 제1위원장은 잠수함들의 실동훈련을 참관하고 당 70주년인 내년을 "해군무력강화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는 해로 되게 하자"라며 전투훈련의 혁신을 강조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공군사령관 리병철 노동당 요직으로 옮겨(1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수행자 중 리병철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으로 호명함.
 - 통신은 리병철 대장 대신 김정은 제1위원장을 현지에서 영접한 신임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은 최영호 항공군 중장이라고 밝힘.

- 북한 최룡해 방러 이후 첫 공개활동…청년동맹 행사 참석(12/12,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12월 17일)를 맞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모임이 열렸다고 최룡해 비서가 참석했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도 12일 최룡해 비서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17~24일 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함.
 - 청년동맹은 만 14~30세의 모든 청년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북한 최대의 사회단체로, 노동당, 인민군과 함께 체제 유지를 위한 '3대 보루'로 꼽힌다고 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내년 국가기념일, 올해와 변동 없어(12/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보도를 통해 북한 '평양출판사' 발간 '주체 104(2015)년' 달력은 매월 표기된 국가기념일과 관련 설명이 올해 달력과 일치했다고 전함.
 - 뉴스는 내년에 집권 4년차를 맞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인 1월8일이 올해 달력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평일인 검은색으로 표기됐고 그의 생일에 대한 다른 표기나 설명은 없었다고 전함.
 - 또 뉴스는 달력의 표지에 2011년 딸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2012년 초 수정 발간된 달력부터 실리기 시작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가 4년 연속으로 등장했다고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장성택 처형' 침묵... "로켓발사 성공한 날"(12/1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2일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간부와 인터뷰에서 "오늘은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킨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를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성과로 부각시킴.
 - 방송은 2년 전 광명성 발사가 김정일의 '지도'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명성 발사 성공을 '김정일 애국주의가 안아온 민족사적인 대승리', '우주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한 역사적 포성'이라고 치켜세움.
- 북한, '3년 탈상' 이후 김정은시대 본격 개막 예고(12/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3면에 실린 '우리는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보낸 시간이 '성스러운 3년'이자 '불덩이처럼 뜨겁게 흐른 3년'이었다고 회고함.
 - 신문은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대형 건설사업을 열거하며 "(김정일 위원장이 만든 토대 위에서) 눈부시게 도약할 수 있는 정치사상적, 물질문화적 재부를 풍만하게 마련한 역사의 3년이었다"고 평가함.
 - 또 "새로운 출진 북을 팡팡 울리며 용기백배 나아가는 강대한 철의 대오 앞에 '그이'이시자 곧 위대한 승리가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거연히 서 계신다"며 신문은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예고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공연(조선인민군 제2기 제5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 당선 군부대들 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 관람 및 연설(12.9,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12.9,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일성 저작('64.12.8,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 발표 50주년 기념보고회, 12월 8일 평양대극장에서 김기남(黨 비서)·량홍주(문화성 黨 책임비서) 및 영화예술부문 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2.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을 '주체혁명의 연대기마다 주체의 강성국가건설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끈 탁월한 정치가, 위인중의 위인'이라며 '김정일 생전 강성국가건설 노고('09년 200여개 현지도 등) 찬양(12.8, 중앙통신)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단장: 정영원 청년동맹 부위원장), 12월 9일 러시아 일정 마치고 귀환(12.9, 중앙통신·평양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은률광산·재령광산 현지요해(12.10,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친선대표단(단장 : 서호원 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12.11 베트남 방문 후 귀환(12.1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의 선군혁명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맹세모임, 12월 12일 최룡해(黨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진행(12.12,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계획경제'와 거리두기... "국가가 다 지도 못해"(10/30, 경제연구; 12.14, 연합뉴스)
 - 북한은 경제학술계간지 '경제연구' 4호(10월 30일 발행)에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강국 건설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함.
 - 이 논문은 "각 기업소의 경영 효율을 높이려면 중앙집권적 지도를 일면적으로 강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기업소들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지도할 수는 없다"며 "생산자대중이 생산·관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하고 기업관리를 창발적(창의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함.
 - 다만 논문은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강화한다면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무시하고 기업의 자유를 주장하는 편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방안이 '계획경제 체제의 완전한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나. 주요 후속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한, 중국에서 태블릿 수입량 급증세"(12/12, NK뉴스)
 - NK뉴스는 12일 중국 세관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2월에는 전혀 없었던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태블릿PC 수입량이 지난 10월 한달간 4천대를 넘었다"고 전함.
 - 이어 뉴스는 북한 내 노트북 사용량도 증가했다고 소개하며, 북한의 노트북 수입은 2009년 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천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데스크톱 컴퓨터 수입량은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함.
 -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코커렐 대표는 "평양의 가게에서 랩톱과 태블릿PC를 팔고 수리하고 있다. 이런 기기의 사용은 북한 중산층에게 보편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올해 식량 부족분 72% 확보"(12/12, 미국의소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72%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FAO가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외부의 지원과 수입을 통해 확보한 곡물은 24만4천700t이며, 이는 부족분 34만100t의 약 72% 수준이며, 식량 확보방식은 수입이 21만8천t, 외부 지원이 2만6천100t이라고 방송은 전함.

라. 대외 경제관계

- "북한 스위스산 '명품시계' 올해 수입량 '0'"(12/1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올해 스위스산 '명품 시계'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스위스시계산업연합이 12일 공개한 시계 수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한은 스위스산 시계 수입량은 없다고 전함.

- 평양철도대학의 '토벽식온실' 등 "각지에 무난방박막온실에 의한 버섯재배 장려" 및 평안남북도 등 성과 선전(12.8, 중앙통신)
- 가구제품·일용품 도안 전시회 폐막식, 12월 9일 김용진(내각부총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진행(12.9, 중앙통신·중앙방송)
- 고려의학과학원 고려약연구소, 협심증 치료에 좋은 '단삼은행주사약'을 개발했다고 선전(12.9, 중앙통신)
- 홍건도간석지 건설장, 12월 10일 '50만산 대발파' 진행(12.10, 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새로운 수질정화제 '선경' 개발(12.10, 중앙통신)
- 정동길(국가우주개발국 부부장), '우주과학기술토론회(12.10, 김일성종합대학)'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주과학기술발전 사업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부연(12.11, 중앙통신)
- 강계시에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 "인풍원(연 건축면적 4,400여㎡) 건립 및 수영장 등 편의봉사시설 소개 선전(12.11, 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여러 가지 종이제품들(필기종이·위생종이·판종이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다기능초지기" 개발(12.11, 중앙통신)
- 금야군 금야강2호발전소, 건설 마감단계에서 발전설비 조립 준비에 주력(12.12, 중앙방송)
- 北, '각지에서 에너지 자원을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한 연구와 탐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자연에너지 개발 보도(12.13, 중앙통신)
- 평양식료연합기업소, 연간 인민경제계획 초과(118%) 수행(12.13, 중앙방송)
- 자강도 강계목장 등 축산기지들, 연간계획 완수(12.13,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북한, '처형설' 탈북 청소년 9명 "행복하게 생활"(12/9, 우리민족끼리TV)
 - '우리민족끼리TV'는 9일 '남조선 괴뢰들에게 유인납치됐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9명 청소년들의 그 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문철, 정광영, 류광혁, 박광혁은 영웅해산시제1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백영원은 함흥사범대학 예능학부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키우고 있다"고 반박함.

- "북한, 내년 4월 마라톤대회 맞춰 국경 다시 개방"(12/12, 미국의소리)
 - 북한이 내년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평양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고려여행사는 11일 북한 체육성 당국자가 내년 4월 12일 열리는 평양마라톤대회에 외국인 관광객의 참가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고려항공도 내년 4월 9일 상하이에서 평양으로 가는 특별여행기를 운항할 예정"이라며 "이는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으려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를 대회 이전에 해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는 방송은 전함.

- 북한, 라오스 북송 청소년 기자회견...처형설 반박(12/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이들 청소년 9명이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매체, 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도함.
 - 기자회견에서 사회자는 남한과 미국의 '인권모략가들'이 최근 이들 청소년의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을 제기했다며 "반공화국 인권모략 나발이 얼마나 허황하고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다"고 밝힘.

- 미국인 또 불법입북...평양서 미국 비난 기자회견(12/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공민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스가 14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했다"며 그의 발언 전문을 공개함.

- 마르티네스 씨는 자신을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나서 자란 미국 시민이며 현재 29살"이라고 소개하고 북한에 도움이 될 '가치있는 자료'를 전달하고자 중국 단둥(丹東)에서 압록강을 건너 입북했다고 밝힘.
- 그는 기자들과 문답에서 "아주 훌륭한 호텔에서 체류하고 있다"며 "체류 일정이 끝나면 베네수엘라에 정치적 피난처를 요구할 결심"이라고 설명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김정일 3주기 앞두고 추모 분위기 조성(1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모든 주민은 김정일 시대의 '애국주의'를 이어받아 국가 발전에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사설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휴양소 등 최근 완공된 시설을 김정은 체제가 이룩한 '사회주의 선경'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국주의'가 뒷받침된 결과라고 주장함.
- "10월 북한국방위 신축청사 붕괴로 80명 숨진듯"(12/9, 도쿄신문; 연합뉴스)
 - 도쿄신문은 지난 10월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신축 청사 공사현장(평양)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고 9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 군 당국이 외국 위성에 사고 현장이 포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을 차단한 채 이틀에 걸쳐 잔해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함.
 - 연합뉴스는 9일 보도를 통해 도쿄신문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 지난해 말라리아 환자 34% 감소"(12/11,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보다 34% 감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인용해 11일 보도함.
 - 방송을 통해 리처드 시벌스키스 WHO 연구관은 "북한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11년부터 3년간 감염 위기 주민 60% 이상에 모기장과 말라리아 예방약을 지원했다"고 설명함.
 - 시벌스키스 연구관은 "말라리아 퇴치 단계에 이르려면 모든 환자는 물론 감염 경로 관리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에서는 감염자와 주변 사람에 대한 관리가 100%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우려함.

- 북한 체조요정 산파 김춘필 감독... "선수 선발의 명수"(12/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북한)의 체조 종목 부문에서 특기선수 선발의 명수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라며 북한 여자체조 감독인 김춘필(53)을 소개함.
 - 신보는 김 감독이 김광숙과 홍은정을 세계적인 선수로 양성한 비결은 북한 선수의 신체적 특징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한 데 있다고 전함.
 - 이어 신보는 김춘필 감독이 "우승의 영예를 지니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표어로 삼아 오늘도 훈련장에서 선수들과 땀을 흘리고 있다고 소개함.

-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 새로 개설... 학보도 수록(12/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2일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12일 대학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공개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www.ryongnamsan.edu.kp)에는 대학 역사와 연혁, 교육 과정, 과학 연구 성과, 출판 자료, 대외교류 자료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함.
 - 특히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최근 학보가 수록돼 있어 북한의 전반적인 연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 사망(12.17) 3주기를 앞두고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은 우리(北) 군대와 인민의 마땅한 본분이고 혁명적 도리'라며 '모든 일꾼들은 장군님의 영전에서 다진 맹세를 심장깊이 새기고 조국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강조(12.10,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 전집' 제9권 출판(12.10, 중앙통신)
- '김정일 업적 연구 채택' 중앙연구토론회, 12월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김기남(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 및 중앙과 평양시내 黨 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2.11, 중앙방송·중앙통신)
- 로철수(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국장), '유적유물들에 대한 학술고증 및 보존복원방안 작성 추진과 민족유산보호사업 과학화와 자료기지구축사업' 등 "민족문화보호사업 활발히 전개" 강조(12.11, 중앙통신)
- 중앙미술전시회 개막식, 12월 12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12.12, 중앙통신·중앙방송)
- 2013년 5월 강제 북송된 탈북청소년 9명, 12월 12일 고려동포회관에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을 통해 '반공화국 인권모략이 터무니없음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진다'며 우리 北韓인권단체의 '처형설과 감금설'을 반박(12.12,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성 김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대화 희망한다" (12/12, 연합뉴스)
 -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는 12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미 양자대화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음.
 - 지난 10일 중국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과 접촉한 성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그 같은 대화) 비핵화 약속에 대한 우리 기대를 충족할 수 있고 회담 재개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나는 중국이 그 부분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음. 또한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를) 매우 진지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중국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미·북 관계

- "북한, 뉴먼 석방 후 호텔비와 식사비 350만원 청구" (12/10,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해 12월 북한 당국이 미국인 메릴 뉴먼(85)씨를 석방한 후 억류 기간 숙박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3천241달러(358만원)를 뉴먼 씨에게 청구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10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뉴먼 씨를 억류했던 평양 양각도호텔 하루 숙박비 60~75달러, 식사비 591달러, 후식비 14달러, 분실된 접시 값 3달러 외에도 뉴먼씨가 억류 초기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국제전화를 한 비용 23달러도 청구했다.

- 뉴먼씨는 석방되고 몇 주 지나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를 통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청구서를 전달받았지만 비용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미국 '북한위협론'은 중국 견제 위한 술책" (12/13, 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미국 태평양사령관 내정자의 발언을 비난하며 이 같은 주장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주변대국을 제압하려는 과립치한 기만술책'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내정자의 '북한 위협'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주변대국을 제압하기 위한 한갓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어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각종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탓에 아시아가 '군비경쟁의 치열한 대결장'으로 변지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미국의 패권주의 질서 수립 기도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CIA 고문' 비난 ... "안보리는 미국부터 처벌해야" (12/13, 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실태에 관한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최근 공개된 데 주목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CIA 고문 책임자들의 처벌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 인권문제를 논의하려면 몇몇 인간쓰레기들이 꾸며낸 허구적인 우리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신작칙(以身作則, 솔선수범)의 견지에서 상임이사국인 미국에서 자체 폭로된 세기적인 특대형 인권유린행위부터 즉시 문제시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법정에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이어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미군이 6·25 전쟁 시기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민간인 3만5천 명을 학살했고 전후 남한에서는 '윤금이 살해 사건'과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북한, 잔류 일본인·일본인처 면회 제안 … 일본 거절" <교도통신> (12/11, 연합뉴스)
 - 북한이 전후 북한에 남은 '잔류 일본인'과 재일 조선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인 배우자('북송 일본인 처'〈妻〉)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절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올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협의 때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본 정부 대표단에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 처 면회를 제안했다고 북수의 북일 관계 소식통이 밝혔음.
 - 그러나 일본 대표단은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싶다"며 거절했음. 일본 측은 일본인 처 등이 일본으로의 일시 귀국이나 영구 귀국을 희망하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납치 재조사가 뒤로 밀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북한, 올해 식량 부족분 72% 확보" (12/12, 연합뉴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72%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음. FAO가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외부의 지원과 수입을 통해 확보한 곡물은 24만4천700t임.

- 이는 부족분 34만100t의 약 72% 수준임. 앞서 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이 기간 북한의 곡물 생산은 503만t 규모로, 34만100t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음.
 - 식량 확보방식은 수입이 21만8천t, 외부 지원이 2만6천100t이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과 WFP, 핀란드, 캐나다가 밀을 지원했고 WFP와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강냉이를 전달했음. 북한은 또 유럽연합(EU)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중국과 인도로부터 쌀을 수입했으며 특히 중국에서 강냉이와 쌀, 잡곡, 밀가루 등 총 18만1천413t을 수입했음.
- 북한 인권, 이번 주에 안보리 상정될 듯 (12/14, 연합뉴스)
-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이번 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 이 소식통은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먼저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하게 된다"면서 "논의과정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안건으로 오르지만, 15개 이사국 중 1개 이사국이라도 견해가 다르면 투표를 해 9개국 이상이 찬성할 때 안건으로 채택된다"고 설명했다.
 -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국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다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것을 고려하면 상정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안건이 상정된 직후 곧바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토의가 진행될지, 아니면 별도 일정을 잡을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 의회 '한·미·일 MD협력 강화' 압박 ... 국방수권법 확정 (12/10,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의회의 국방수권법 확정에 따라 내년 초부터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이 독자로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체제에 적극적으로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이어서 검토의 방향이 주목됨.
 - 미국 의회는 또 국방예산 감축의 흐름 속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대외정책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펜타곤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음. 법안은 '국방장관이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조사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국방장관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다시 3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적시했음.
 - 독립 조사위원회가 보고해야 할 내용은 향후 10년 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위기에 대한 평가, 미국과 동맹·우방들의 역내 군사력 편제 조정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잠수함과 해군, 탄도미사일, 방어, 정찰 등 미국의 군사능력 약점에 대한 평가 등임.

- 미 동아태 차관보 "한·일 관계 개선이 내년 미국의 우선순위" (12/11,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한·일 관계 개선이 내년도 미국의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밝혔음.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통일정책 세미나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러셀 차관보는 "양국이 개방적이고 친근하며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 과제"라며 "한국과 일본이 계속 악화된 관계로 지내기에는 세계경제가 너무 취약하고 국제·지역안보 상황이 너무 염려스러우며 함께 풀어가야 할 글로벌 현안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협상이 교착상황에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지난 20세기 과거사와 관련해 심각하고 고통스런 이슈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어느 일방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끌어내도록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총리, 리퍼트 대사 접견 … "대북공조 강화돼야" (12/12, 연합뉴스)

-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원활히 진전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미 공조가 더욱 강화돼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한·미 동맹에 대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자 범세계적 이슈에 대응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도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동맹의 심화·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 정 총리는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를 올바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한·일·중 3자 협력 등 역내 협력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측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리퍼트 대사는 "워싱턴에서도 에볼라 문제 대응 등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과 FTA를 양대축으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와 역사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미국 측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 한·중 관계

■ 정의장, 주한中대사 접견 … "한·중관계 더 돈독해지길" (12/12, 연합뉴스)

-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본관 의장집무실에서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내주 중국 방문 일정과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정 의장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장더장 상임위원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며, 베이징과 충칭에 각각 2박3일씩 머물며 장더장 상임위원장 등 중국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중국 방문에는 2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며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이에 대해 추귀홍 대사는 "현재 양국관계가 과거 어느 때 보다는 돈독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장의 중국 방문을 기점으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음.

다. 한·일 관계

- 일본 법무성 "혐오시위 근절 위해 홍보·교육 강화" (12/11, 연합뉴스)
 - 일본 법무성이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자국내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 국민, 인종에 대한 혐오 시위 또는 발언)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11일 파악됐음.
 -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헤이트스피치, 용납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지난달 혐오 시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성은 "일부 국가와 민족 또는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배척하는 듯한 언동을 말하는 헤이트스피치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사람들에게 불안과 혐오감을 주는 차별적 언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차별 의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세코 히로시게 관방부(副) 장관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도, 형사 처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의 관련성,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연내 개최 어려울 듯" <요미우리> (12/12, 연합뉴스)
 -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연내에 개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음. 3국 회담 의장국(순회)인 한국의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2~3일 중국, 7~8일 일본을 각각 비공식 방문해 협의했지만 중국 측이 '역사문제 등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대응을 14일 중의원 선거 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내년 1월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소개했음.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때 연내에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음.

- 박 대통령은 또 지난달 1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지난 9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오바마, 아베에 한·일 관계 회복 노력 촉구" <교도통신> (12/13,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아베 총리에게 요구했다고 미·일 관계 소식통이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에 우려를 지니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풀 수 없다는 점을 아베 총리에게 직접 얘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라. 한·러 관계

-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인터뷰 (12/08, 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1년간 양국 간 경제통상을 촉진하기 위한 러시아 측의 건의나 요구를 수용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건설적으로 임해왔다"면서 "양국간 협력 모델을 찾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음.
 - 갈루슈카 장관은 최근 모스크바 극동개발부 청사에서 '한·러 대화(KRD)' 포럼에 참석한 한국 언론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매력적인 경제협력 대상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음.
 - 그는 또 "경제통상분야에서 적극적 협력이 안보를 구축하고 안전을 가져다 준 사례가 많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 훌륭한 구상이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천방법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러 "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에 한국 등 투자 기대" (12/09, 연합뉴스)
 - 막심 세레이킨 극동개발부 차관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에 합의된 철도 개보수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과 중국 등이 북한 내륙 철도 개보수 사업에 투자하길 기대한다고 러시아 극동 지역 통신사 프리마미디어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 세레이킨 차관은 철도 개보수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실사 등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러시아가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단계에서 외국 투자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10월 20년에 걸쳐 북한 내륙철도를 개보수하는 사업에 합의하고, 1차로 250억 달러를 투입해 3천500km구간을 우선 개보수하기로 했음. 러시아는 북한 내 광물자원을 개발해 판매하는 대금으로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러 극동 협력 확대 ...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하자" (12/09, 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는 주한러시아 무역대표부, 한·러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무역·투자 분야 협력을 위한 '한·러 경제포럼-웰컴투 더 파 이스트(Welcome to the Far East)'를 개최했음.
 - 한 회장은 "물류 인프라 개선은 기업의 비용절감,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발하는 좋은 방안"이라며 "특히 러시아, 중국, 한반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자루비노항을 자유항만으로 변화시키도록 당사국들이 함께 물류 기반 확충과 통관절차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러시아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러시아는 천연자원뿐 아니라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으며, 북한과의 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 미·중 관계

- 미국-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또 갈등 (12/09,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또 대립했음.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중국이 내세우는 남중국해 9단선은 국제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중국 측을 비판했음.
 - 중국은 이 안에 있는 난사군도, 시사군도, 황옌다오<黃巖島, 스카보러 섬) 등 모든 도서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미국은 9단선 등 권리가 있는 토지 지형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해양 권한 주장도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맞서 왔음.
 - 이에 대해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보고서 발표를 정면으로 비판했음. 홍 대변인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권리와 주장은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형성돼 온 것"이라면서 "미국의 보고서는 기본적 사실과 국제 법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음.

- 중국 "미국, 반성해야" ... 'CIA 고문' 비난 (12/10,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실태를 담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된 데 대해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음.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한결같이 고문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으며 미국은 이번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잘못된 방법'을 교정하고 이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또 "중국은 안정적인 걸음으로 민주법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원칙에 대한 존중·보장과 관련된 헌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인민이 누리는 각 분야의 인권 수준은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이중기준을 들이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각종 인권보고서 등을 통해 중국의 인권실태를 비난해온 미국을 다시 한 번 겨냥했음.

- 미국·중국, '인권·對대만 무기판매' 놓고 충돌 (12/11,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인권 문제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음. 미국은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존 케리 국무장관과 맥스 보커스 주중 대사가 잇따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중국을 자극했음.
 - 이런 미국 관리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라"며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했음.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나라의 인권상황은 그 나라 국민만이 발언권이 있다면서 미국은 심판을 자처해 타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음.
 - 미국과 중국은 최근 미국 의회가 대만에 군함 4척을 판매하는 내용을 담은 '군함이송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음. 미국 연방 상원은 지난 4일 '군함이송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하원도 지난 4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대만에 대한 군함 판매는 미국 행정부의 심사·승인만 남게 됐음.

바.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사. 미·러 관계

- 러 외무차관 "미국 제재는 푸틴정권 전복 목적" 비난 (12/09,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제재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하지만 미국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재의 목적이라고 반박했음.
 -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목표가 러시아 정권 교체를 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것은 비밀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관계가 매우 냉랭하며 제재가 오래 계속될 경우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빠르고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이 같은 러시아 측의 주장에 대해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공보관은 이날 "미국은 러시아 지도부를 교체하길 원치 않으며 제재의 목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데 있다"고 반박했음.
- 러시아, 미국 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승인에 반발 (12/13, 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허용하는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 법안'을 승인한 데 대해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12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 상·하원이 논의와 적합한 표결도 없이 승인한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 법안'에 담긴 노골적인 대결 의사에 깊이 우려한다"고 비판했음.
 - 외무부는 이 법안이 "자국 동부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러시아의 내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비정부기구(NGO)를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음.
 - 법안은 내년에 우크라이나에 3억5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고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지원할 것도 규정하고 있음. 이밖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민주주의 제도 지원을 위해 2천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아. 중·일 관계

- 시진핑 "역사범죄 부인은 범죄 되풀이 의미" (12/13,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역사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범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는 일본 측을 정면으로 비판했음. 시 주석은 중국이 처음으로 제정한 난징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인 이날 장쑤성 난징 시내 난징대학살희생동포기념관에서 거행된 추모식에서 "역사를 잊는 것은 배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난징대학살은 제2차 대전의 3대 참사 가운데 하나로 반인류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암흑의 사건"이라며 "일제 침략의 엄중한 범죄를 잊지 말아야 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어떤 행위도 인류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추모식을 개최한 이유에 대해 "계속 원한을 키워나가자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중·일 인민들은 세대를 넘어 우호관계를 키워 나가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로 향함으로써 인류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공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시 주석이 일본 측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지난달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계기로 호전 기미를 보여 온 중·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서태평양서 대규모 훈련 … 일본과 신경전 (12/14, 연합뉴스)

- 중국군 함선과 전투기가 최근 일본 남부에 있는 오키나와 인근 미야코(宮古)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일 양국이 이번 훈련을 놓고 또다시 날카로운 신경전을 전개했음.
- 14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중국일보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합참에 해당)는 전날 발표를 통해 "일본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가 12일 오후 6시께 미야코섬 동남쪽 120km 지점에서 중국 군함이 동중국해 쪽으로 북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음.
- 일본 방위성은 이에 앞서 최근 일주일 사이 중국 군용기가 모두 4차례 이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중국 군용기의 출현에 대응해 일본 전투기가 '긴급발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중국 국방부는 지난 12일 브리핑 등을 통해 "우리는 이미 지난 4일 중국해군이 서태평양에서 원양훈련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서태평양 훈련은 연간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日조총련 "北인권소동, 북남관계 악화 파국 초래"(12/8, 뉴시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민족단합의 방해를 노린 인권 소동'이란 제목의 시론에서 북한인권 공세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신보는 미국 주도의 인권결의에 가담하는 남한 당국의 노림수는 "인권문제를 구실로 북을 모해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데 있다"고 비판했음.
 - 그러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단합된 힘으로 반조선 인권결의의 흉악한 목적을 널리 폭로하고 이를 철저히 분쇄하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한, 인권문제 안보리 상정에 반발... "침략 명분용"(12/9,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군사적 침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음.
 -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이 지난 5일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거론하고 "미국은 반공화국 인권결의라는 정치협잡품이 날이 갈수록 세인의 규탄과 배격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안보리가 인권문제를 논한다면 흑백 인종차별을 비롯한 미국의 인권문제부터 다뤄야 하며, 이를 외면하고 북한인권 문제만 다룰 경우 "미국 강권의 도구로 전락된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투표 전 미국 압력 행사"(12/9,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9일 논평에서 "인권결의안 표결이 박두했을 때 일부 나라 대표가 우리를 찾아왔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미국이 자국의 내부 문제를 국제화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또 "대표들은 '조선 문제가 정치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경제 원조에 목매인 정부의 지시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했다"고 강조함.
 - 또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유엔의 '간판'을 이용했다면서 "우리의 '인권문제'를 부각시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라고 역설했음.
 - 한편 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유럽연합(EU)에 대한 비난을 거듭 이어갔는데, EU가 객관적인 현실을 확인하지 않고 미국을 추종해 결의에 앞장섰다고 "이는 인권 분야 대화와 협력을 주장해온 자신들의 공약을 뒤엎는 청맹과니(사리분별이 없는 사람)짓"이라고 비난했음.

- 북한, '처형설' 탈북 청소년 9명 "행복하게 생활"(12/9,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는 '남조선 괴뢰들에게 유인납치됐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9명 청소년들의 그 후'라는 제목의 동영상상을 통해 지난해 5월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되었던 탈북 청소년들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고, 이들이 현재 북한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이 이들 탈북 청소년의 생활상을 공개한 것은 최근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이들에 대한 처형설과 수용소 추방설이 나돌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 TV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 4명은 예술과 IT 분야 등의 영재를 양성하는 평양의 유명 학교인 금성제1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이들의 교내 생활상을 소개했음.
 - 특히 장국화가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인터뷰 하루 전날 퇴원했다고 밝혀 이들 청소년의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음.

- 북한, 강제북송 청소년 영상 또 공개…문철·백영원 포함(12/10, 연합뉴스)
 - 북한은 '우리민족끼리TV'는 웹사이트에 '남조선 괴뢰들에게 유인납치됐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9명 청소년들의 그 후 이야기-2'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9일에 이어 탈북 청소년 9명의 모습을 공개했으며, 특히 10일 모습을 드러낸 탈북 청소년 중에는 처형설이 제기됐던 문철과 백영원도 포함됐음.
 - 영상에는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 가운데 문철, 정광영, 류광혁, 박광혁, 백영원 등 5명의 모습이 담겼으며, 백영원을 제외한 4명이 양강도의 영재학교인 영웅혜산제1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보여줌.
 - 우리민족끼리TV는 "저 아이들이 다 잘못됐다고 나쁜 소리를 하는 남조선 괴뢰들의 거짓말"을 거론하며 문철이 "그런 소문 낸 XX는 때려죽이자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그대로 내보냈음.
 - 이어 백영원이 함흥사범대학 체육예능학부 미술과 1학년이라며 그의 모습도 공개했는데, 그는 "오직 공부하는 데만 전심전력해서 원수님께 꼭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촬영 시점이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북한, 남한 인권법 제정 또 비난…"남북관계 파국"(12/10,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인권의 간판을 단 대결악법조작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에 대해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 수 없는 최악의 파국상태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음.
 -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해와 악의에 찬 비방, 범죄적인 뼈라 살포를 법화함으로써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심화하고 종당에는 전쟁밖에 몰아올 것이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강조함.

- WHO '북한 지난해 말라리아 감염자 34% 감소'(12/10, 미국의 소리)
 -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2014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도에 비해 34% 감소해 2013년 북한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감염자는 1만 4,407명임.
 - 또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의 말라리아 감염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음.
 - 세계보건기구의 리처드 시벌스키스 (Richard Cibulskis) 연구관은 북한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11년부터 3년 간 말라리아 감염 위기에 있는 주민 60% 이상에게 모기장과 말라리아 예방약을 지원했으며, 2013년에는 말라리아 환자들에게 충분한 치료약을 지원했다고 밝혔음.
 - 시벌스키스 연구관은 말라리아 퇴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말라리아 환자는 물론 감염경로 관리가 확실히 이뤄져야 하나, 북한에서는 말라리아 감염자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100 퍼센트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 활동에 진전이 있을 경우 이런 분류가 바뀔 수 있다고 전함.
- WFP “북 가뭄, 작황에 부정영향”(12/10,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이 10일 공개한 '동아시아 2014 강우 보고서'는 올해 북한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30~50% 적어 봄 작황뿐만 아니라 가을 추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음.
 - 이 보고서는 세계식량계획의 식량 지원과 관련한 수요를 분석하는 전문 부서인 '취약성 분석 및 지도제작'(VAM)국이 지난 4월부터 11월 초까지의 동아시아 지역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작성한 것으로,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뭄 피해가 가장 많이 컸을 것으로 내다봤음.
 - “북한 종교탄압 국제법정 회부해야”<영의회 보고서>(12/11, 연합뉴스)
 - 영국 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인 종교·신념의 자유 연구그룹은 10일(현지시간) 북한 종교탄압 실상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힘.
 - 연구그룹은 유럽 북한주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주체사상 외에 다른 신념이나 종교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를 이유로 무고한 주민들이 체포돼 고문을 받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고 공개했음.

- 보고서는 탈북자의 99.7%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응답한 북한인권 정보센터의 설문 결과와 2009년 성경 배포 죄목으로 고문을 받고 수용시설에 보내진 사례도 소개했음.
 - 연구그룹은 ICC 회부 노력 외에 비공식적 법률조사 등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권고했으며, 교육 및 문화 분야 교류 확대와 BBC 한국어 방송 추진 등 북한의 정보 봉쇄를 뚫는 소통 노력을 강조하고,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확대와 탈북자 네트워크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음.
- 북한, 박 대통령 인권 발언 원색 비난…“입조심하라”(12/11, 연합뉴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문제를 비판한 데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음.
 -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세계정책회의(WPC) 기조연설과 지난달 28일 한국-헝가리 정상회담 발언,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 메시지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문제를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망발', '얼빠진 소리', '추태' 같은 거친 말로 매도했음.
 - 또 박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논하려면 미국의 흑백 인종차별과 '고문 만행'부터 규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덮어두고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 상전의 대변인, 식민지 하수인으로서의 추악한 몰골만을 더욱 내보일 뿐"이라고 강조함.
- 북 군량미 징수, 황해도서 평안북도로(12/1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올해 흉년이 든 것으로 알려진 황해도 지방에 대해 군량미 수매 과제를 대폭 줄인 대신 농사가 좀 됐다는 평안북도에 군량미 과제를 부과해, 뜻밖에 군량미 과제를 떠안은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함.
 - 북한의 농업사정에 밝은 한 간부 소식통은 대표적 곡창지대로 알려진 연백벌과 재령벌이 흉작으로 알곡 생산이 크게 줄어들게 되자, 국가에서는 긴급조치로 이곳 농장에 할당되었던 군량미 수매곡 가운데 약 50%를 줄였고, 그 수매곡을 평안남북도 일대에서 떠넘겼다고 전했음.
 - 그는 이러한 긴급조치가 황해도 지방 농민들을 구제하고, 군량미와 수도미를 끌어들이는데 차질이 없도록 내각과 군부가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 한편 농사가 좀 됐다고 하는 평안남북도 일대의 농민들은 추가로 군량미 수매 과제가 떨어지자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평안북도 지방에서 최근 중국에 방문 온 한 주민은 일부 농장 간부들이 포전관리제 실시 후 북한 당국이 정한 6:4의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을 미리 타산하고 곡물을 탈곡장에 끌어들이기 전에 미리 농민들에게 식량 분배를 실시했다고 전함.
 - 하지만, 인민군 후방군관들은 평안북도 농장들에 나가 군량미 우선 보장을 요구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식량 분배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엔 '북한, 올해 식량 부족분 72% 확보..상황 개선'(12/12, 미국의 소리)
- 식량농업기구(FAO)는 11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식량 부족분의 72%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외부의 지원과 수입을 통해 확보한 곡물은 24만 4,700t 으로, 부족분 34만 100t에서 약 10만 t이 모자라는 규모임.
 - 북한이 확보한 곡물 가운데 수입은 21만 8,000t, 외부 지원은 2만 6,100t임.
 - 이 중 외부 지원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세계식량계획, 핀란드, 캐나다가 지원한 밀 1만6천2백t과 세계식량계획,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지원한 옥수수 5,600t 등이 포함됨.
 - 북한은 또 유럽연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밀을, 중국과 인도로부터 쌀을 수입했음.
 - 한국 민간연구소 GS&J의 권태진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올해 식량 부족분이 예년에 비해 많지 않았으며,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北, 美 CIA 고문실태보고서 거론...“UN은 미국부터 처벌해야”(12/13, 헤럴드경제)
- 북한은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실태에 관한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최근 공개된 데 주목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CIA 고문 책임자들의 처벌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담화는 물고문을 비롯한 CIA 고문 실태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중세기적 고문행위들이 미국 대통령의 승인과 비호 밑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감행됐으니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초, 인권 불모지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음.
- 이어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미군이 6·25 전쟁 시기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민간인 3만5천 명을 학살했고 전후 남한에서는 '윤금이 살해 사건'과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음.

2. 북한 인권

- 성 김 일본 방문... "한일 건설적 관계 기대" (12/8,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8일 일본 외무성에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회담하고 서 취재진에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관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음을 전함.
 - 성 김 특별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해 "북한은 국제 사회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인권 상황 (개선)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협조로 진전을 보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차대통령 "북핵 개발이 동북아 최대 불안요인" (12/8,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개최식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 동북아에서의 신뢰회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동아시아의 신뢰 결핍을 풀기 위한 '신뢰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세부 구상을 설명했다.
 -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과 관련해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이라는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며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가결되자 북한은 초강경 대응을 선포하며 '핵전쟁'을 언급하는 등 또다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영·일 단체, 북 인권 ICC회부 촉구(12/8,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과 일본의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시위와 서한 보내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음.
 -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18개국의 일본주재 공관에 이달 중순 본회의에서는 찬성 아니면 기권이라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음.
 - 이 편지는 아시아인권 등 15개 단체와 '납치피해자 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 등 10명의 납북자 가족이 공동으로 보냈다고 함.
 - 한편, 영국 북한대사관 앞에서는 8일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탈북민연대' 주도로 8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유럽북한인권주간 개막 행사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림.
 - 시위에서는 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강제 복송된 탈북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음.

- 차대통령 "北주민인권 말로 표현못할 정도로 열악"(12/10,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제66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지적하며 "앞으로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되어 사람답게 잘 살 수 있고, 나아가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여야, 인권 중요성 한목소리…강조점은 엇갈려(12/10, 뉴시스)
 -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참혹한 현실에 국제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북한인권문제를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음.
 - 이에 더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시작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음.

- '인권의 날' 미국서 북한인권상황 규탄행사 잇따라(12/11, 연합뉴스)
 - 세계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음.
 - 미 국무부는 국무부 청사로 탈북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고,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연방하원에서 라오스 강제북송 청소년들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 국무부가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탈북자들을 청사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조지프 김(24) 씨와 박연미(21) 씨는 지옥과도 같았던 탈북 과정을 회고하며 "북한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음.
 -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인권특사는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늘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일이 적절하다"고 말했고,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한반도 전체를 더 빨리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하원에서 강제북송된 청소년 9명에 대한 유엔 차원의 생사 확인을 촉구했으며,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범수용소에서 이루어지는 고문 등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유엔의 모든 국가가 유엔총회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음.

- 국제 인권단체들, 안보리 북한인권 공식 논의 촉구(12/11, 미국의 소리)
 - 휴먼 라이츠 워치, 프리덤 하우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세계기독교연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9개 국제 인권단체들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북한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함.
 - 이 단체들은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촉구한 것에 지지를 표하며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북한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보리 회의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함.

- 케리 미 국무 "탈북자 신동혁, 인권의 살아숨쉬는 표본"(12/11,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일을 맞아 성명을 내고 각 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했음.
 - 특히 지난 9월 유엔총회 기간 자신이 주최한 북한인권 고위급 회담에 탈북자 신동혁씨를 초청해 대화를 나눈 것을 거론하며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해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신씨와 함께 있으면서 세계인권선언의 힘과 지속적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음.
 - 이어 "신씨는 정의를 지지하고 인권탄압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우리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 숨 쉬는 표본"이라고 평가했음.

- 울산시의원 '북한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발의(12/11, 연합뉴스)
 - 울산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비롯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11일 발의했음.
 - 김 위원장은 결의안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국외체류 북한이탈 주민의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결의안은 12일 열릴 울산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임.

- 다루스만 유엔인권보고관 "국제사회 한반도 통일위해 北 인권 해결해야"(12/11, 아시아경제)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민주평통 아시아·유럽 여성컨퍼런스에 참석, '북한인권 현실과 국제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북한 인권개선은 한반도의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조치를 적극 촉구했으며, 북한은 북한 내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법을 근거로 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북한이 형사책임과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없으며 두 가지 모두 책임지고 진행돼야한다는 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라고 못박았음.

- 또한 "한국정부 허가 하에 서울에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되면 북한인권에 대한 추가 파악과 실태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남북통일은 인권통일'이라는 기조장언에서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주민의 생명과 인간적인 삶, 순조로운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핵심과제"라고 전제하고, "우리 국민의 북한 인권 회복 의지가 머지않아 남북인권통일로 결실 맺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함.
- 영국 의회 북한자유주간 공청회...북한 인권개선 촉구(12/12, 연합뉴스)
 - 유럽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영국 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인 북한협의회가 주최한 11일(현지시간) 공청회에는 탈북 인사들이 참석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음.
 - 지성호 북한인권단체 나우 대표는 북한의 장애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전했으며, 북한농업과학연구원 출신인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단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위선을 알리기 위해 대북전단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김주일 재영조선인협회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의 기본권 확대를 위해 BBC 대북 방송 시행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며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음.
 - 미 의회 "정보당국, 북 정치범수용소 조사 보고하라"(12/13, 연합뉴스)
 - 미국 상원과 하원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을 총괄지휘하는 국가정보국(DNI)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조항을 담은 내년도 정보수권법안(H.R. 4681)을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과 10일 각각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2일 전했다.
 - 해당 조항은 당초 지난 5월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최초로 발의한 하원 초안에는 없었으나 7월 말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이 제출한 상원 초안(S. 2741)에 포함됐고 이후 양원의 조율을 거쳐 최종 법안에 반영됐음.
 -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상·하원 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음.
 - 법안은 가용한 정보 수집 범위 내에서 각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보고하되, 수감자 규모, 수감 사유, 각 수용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주요산업,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과정에 개입한 제3국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을 책임진 북한의 모든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정보 등을 담아 보고하도록 했음.

- 이어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적절성, 주거환경, 의료, 근로조건, 부당대우 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위성사진을 비롯해 각 수용소캠프에 대한 비공개 사진을 확보하도록 요청했음.
- 미국 의회 차원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를 행정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미 국무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공개 캠페인 시작(12/13, 미국의 소리)

- 미국 국무부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미국 정부의 국제인권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인터넷 웹사이트(humanrights.gov)를 통해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 6곳의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 미 국무부는 이 웹사이트에 '북한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시작된 이 코너에는 이현서, 지성호, 강철환, 신동혁, 김영순 등 탈북자 5명의 배경과 현재 상황 등이 담겨 있음.
- 국무부는 이들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제 전 세계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은 만큼 그들의 고통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북한 인권, 이번 주에 안보리 상정될 듯(12/14, 연합뉴스)

- 유엔의 한 소식통은 1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을 안보리 의제로 다루자고 요청한 데 따라 북한 인권이 이번 주(14~20일) 중에 안보리에 정식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국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다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것을 고려하면 상정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곧바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토의가 진행될지, 아니면 별도 일정을 잡을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3. 탈북자

- 탈북자 신동혁 다룬 다큐멘터리 국내 첫 상영(12/9, 연합뉴스)
 -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9일 탈북자 신동혁(32)씨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14호 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시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12년 독일에서 제작되어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 국제인권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이 영화에는 고문, 지하감옥 생활 등 신씨가 수용소에서 겪었다고 주장하는 인권유린 실태가 담겼음.

- 남북하나재단·한국PD연합회, 着韓미디어 업무협약 체결(12/9, 뉴시스)
 - 남북하나재단과 한국PD연합회는 9일 통일을 준비하는 着韓(착한)미디어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 이로써 양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이해 및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언론 및 미디어 관계자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언론 및 미디어 관계자 교류·협력을 위한 着韓미디어 포럼 운영,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기부·후원 유치 및 자원봉사,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론 및 미디어 실무교육·연수, 직업훈련 등의 분야에서 협력함.
 - 재단은 탈북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탈북민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범죄문제, 부적응 현상, 인권 침해 등 부정적이고 동정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언론보도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언론과 미디어 관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미 국무부 '북송 탈북 청소년 처형됐다면 개탄할 일'(12/10, 미국의 소리)
 - 2013년 5월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 중 2명이 처형되고 7명이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만약 사실이라면 유엔에서 제기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이 같은 인권 침해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기록된 북한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만연한 인권 유린과 탈북자 처우 실태와 일치하며, 북한이 인권침해를 즉시 중단하고 조사위원회 권고를 이행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 특히 탈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해 역내 국가들의 협조를 당부했음.
 - 이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탈북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난민기구 (UNHCR)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 정부, 북한인권 단체에 최고 25만달러 지원(12/10,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은 9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단체에 각각 최고 25만 달러(약 2억 7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관련 세부 기준이 담긴 내용을 발표했다.
 - 국무부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인권단체가 북한인권 실태 개선 및 증진에 관한 프로젝트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향서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언급한 북한 관련 권고 내용을 지원하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北, 강제복송 청소년 처형설 정면 반박(12/13, YTN)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5월 라오스에서 강제복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이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북한과 조총련 매체, 그리고 외신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음.
 - 기자회견 사회자는 남한과 미국이 제기한 이들 청소년의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이 거짓이란 점을 밝히기 위해 회견을 열게 됐다고 주장했다.
 - 통신에 따르면 회견에는 처형설이 제기됐던 문철과, 백영원이 모두 참석해 발언을 했으며, 복송 청소년 9명은 모두 검은색 교복 차림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달고 있었고 두 팔을 벌리거나 주먹을 쥐고 격앙된 채 말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음.

4. 이산가족

- "이산가족 해결위해 북한에 줄 수 있는것 적극 고려"(12/8, 연합뉴스TV)
 -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경색의 지속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함.
 - 실제로 현재 정부 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현안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천안함에 대해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5·24조치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5. 납북자

- '6·25전쟁 납북자' 260명 추가...총 3천635명(12/10, 연합뉴스)
 - 정부는 8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16차 회의를 열고 260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했음.
 - 이번에 납북자로 인정된 260명 중에는 한성 임시정부에서 재무부 차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한남수 선생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한 노구현씨 등이 포함됐으며, 이로써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된 사람은 모두 3,635명으로 늘었음.
- KAL기 납북 45주년... "정부, 납북자 송환 촉구해야"(12/11, 연합뉴스)
 -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이하 가족회)는 사건 발생 45주년인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음.
 - 황인철 가족회 대표는 불법 납치된 항공기에 대해 '보전을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한 '항공기의 불법납치 역제를 위한 협약'을 남북 모두 비준한 만큼 정부가 북측이 협약을 이행하도록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2007년 비밀 해제된 한미 간 외교문서에는 '남측이 무조건 송환 방침을 바꿔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하여금 인수증에 서명하게 한다는데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무조건 송환'을 요구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남북이 '일부 송환'에 대해 이면 합의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음.

- 북한, 일본 대표단에 잔류 일본인 면회 제안(12/11, 미국의 소리)
 - 교도통신은 11일 북한이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한 일본 대표단에게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 처들의 면회를 제안했었다고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북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지난 10월 평양에서 열린 일-북 협의 때 일본 정부 대표단에게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 처들의 면회를 제안했으나, 당시 일본 대표단은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하기 위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제안은 서대하 북한 특별조사위원장이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협의 시작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통신은 북한의 제안에 대해 납치 문제에 관해 전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일본 독자 제재의 추가 해제 등 대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北 김정일 외국인 납치 직접 지시 사실 가능성"(12/12, 데일리NK)
 -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신에서 보도한 북한 김정일의 외국인 납치 직접 지시설(說)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앞서 워싱턴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익명의 외교 소식통들 말을 인용, "1970년대 후반 조사부라는 북한의 비밀스파이 조직이 외국인들을 납치해 모국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비밀문건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임 대변인은 이어 "다만 과거에 최은희·신상옥 부부 납치사례 등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음.
 - 한편 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핵과 인권문제를 거론하자 북한이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은 왜 우리와 국제사회가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미 단체, 북 고아 2만 명에 영양쌀 지원(12/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에 위치한 국제식량구호기관인 FMSC(Feed My Starving Children)는 영양실조 상태인 북한 어린이를 위한 지원을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미화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영양쌀을 북한 고아원에 보내 어린이의 건강회복을 도울 예정임을 밝힘.
 - 홀리 도네이토 대변인은 이 단체가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그리고 평양의 고아원과 장애인 시설에 영양쌀을 전달하며, 지난 8년 동안 매년 약 420만 끼를 북한에 보냈다고 전함.
- 국제사회 대북지원 급감…10년前 3억불→올해 3천만불(12/9, 연합뉴스)
 -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실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자료를 이용해 2000~2014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을 분석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지원된 원조 공여액(기부액)과 계약상으로 약속된 원조 공여액(기부 약정액)을 합친 대북지원액은 2004년 3억 178만 4천 달러에서 올해는 11월 기준 2,834만 8천 달러로 줄어 10년 만에 90% 급감했음.
 - 2000~2014년 기간에 가장 지원 규모가 컸던 해는 2002년으로 3억 6,083만 5천 달러였던 반면 북한의 2차 핵실험 다음 해인 2010년에는 지원액이 2,449만 2천 달러로 가장 적었음.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경제리뷰 같은 호에 실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과 한국' 보고서에서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을 보면 국가별 지원금액뿐 아니라 대북지원국 숫자도 감소했다고 지적했음.

- 그리고 감소 원인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불안정해진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의 인식,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 등의 영향에서 찾았음.
- **캐에이드 "내년 대북사업 지원확대"(12/9, 자유아시아방송)**
 - 영양실조 상태인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지원해 온 캐나다의 민간구호단체 캐에이드(CanAid)는 내년 초 다양한 모금 행사를 열어 북한 내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캐에이드의 멜 위비 대표에 따르면, 캐에이드는 최근 몇 년 동안 밴쿠버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알리기 오찬 (Lunch and Learn)'이나 북한 관련 학술행사 등을 열며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왔음.
 - 캐에이드의 기부로 연간 약 10만명의 북한 고아와 임산부에게 콩우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원도 원산, 통천, 남포, 형제산, 그리고 평안남도 덕천 지역의 고아원과 탁아소 그리고 산부인과나 진료소를 통해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가 콩우유와 영양강화식품을 제공받고 있음.
- **미 NGO, 북한에 영양쌀 240만 끼 지원(12/10, 미국의 소리)**
 - 미국의 선교단체 나벡 (New Asia Foundation for Education and Culture)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미화 56만 달러 상당의 영양쌀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2월에는 240만 끼가 지원될 예정임.
 - 영양쌀은 쌀과 콩가루, 마른 채소, 비타민과 미네랄 등 여러가지 영양소가 첨가된 쌀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영양쌀은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구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진 뒤 평안남북도 어린이들에게 분배될 계획임.

8. 북한동향

- 대통령이 통일준비위 3차회의(12.2)에서 한 발언(북한 인권문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에 대해 "망발"이라며 '미제의 반공화국 대결각본에 따른 인권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12.7,중앙통신/남조선집권자의 터무니없는 인권 나발)

- 우리 정부의 '북 인권' 연내 안보리 의제 채택 추진에 대해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도발행위로서 절대로 용납 못할 범죄적 망동'이라고 비난(12.7, 중앙통신·민주조선)
- 남한 對北 매체들(테일리NK, OTV 등 4곳)의 '국민통일방송' 설립 추진에 대해 "북남 대결을 격화시키고 反北 인권모략 소동을 통해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괴뢰패당의 책동"이라고 비난(12.8, 평양방송/악랄한 대결야망의 발로)
- 美 퍼거슨市 사태(인종차별 시위) 관련 러시아 외무성 등 비판을 전하며 "인권유린 왕초인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인권재판관, 인권문제에 대해 시비질하는 것은 가소로운 행위"라고 조소(12.8, 평양방송/망신당하는 인권재판관)
- 유엔 北韓인권결의안·北인권법·국민통일방송 등을 거론 '괴뢰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인권 심리모략책동이 절절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하며 '공화국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이 된 불패의 강국'이라고 강조(12.9, 중앙통신·노동신문/천만군민의 사상과 신념을 추호도 흔들 수 없다)
- 北 외무성대변인 증통기자 질의 대답(12.9), 미국이 北인권문제를 UN 안보리 상정을 추진하는 것 관련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안보이사회에 끌고 가는 것은 그것을 구실로 군사적 침략의 명분을 만들어내자는데 속심이 있다고 비난(12.9, 중앙통신)
- * 北인권결의안 유엔 통과 관련 '유엔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인권결의 날조에 순응함으로써 영상에 먹칠했다'고 비난 및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전쟁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12.9, 중앙통신·노동신문/강권과 전횡에 눌리운 공정치 못한 유엔의 처사)
- '北 인권결의안' 유엔 채택 및 국민통일방송 등을 거론하며 '지금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도발행위는 우리(北)의 존엄과 자존심을 참을 수 없이 건드리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모략의 소굴들을 짓밟개버릴 것'이라고 위협(12.10, 중앙통신·노동신문/모략의 소굴을 송두리째 짓밟개 버릴 것이다)

- 남한의 '北 인권법' 제정 관련 '北 인권법은 불순한 야망을 실현하기위한 대결악법'이라며 그것이 제정될 경우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 수 없는 최악의 파국상태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난(12.10,노동신문/인권의 간판을 단 대결악법 조작 책동)
- 최근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한 연이은 총격사건을 거론하며 '美 당국이 빚어낸 인재이며 특대형 인권유린행위'라고 비난 및 '미국은 제 집안의 인권문제부터 바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12.10,중앙통신 논평/퍼거슨 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 뉴욕시 사법당국의 흑인 목졸라 숨지게한 백인경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미국식 인권가치관과 인권제도의 부패성에 대한 뚜렷한 증거'라고 비난(12.10,중앙통신·민주조선)
-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등(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연풍과학자 휴양소 등) 건축물들은 '黨의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창조의 결정체'라고 노동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 선언 및 '김정은 영도의 결실'로 칭송(12.11,중앙통신·노동신문/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은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오는 근본지침)
- 北 「조평통」 대변인, 12.11 중통기자 문답을 통해 박대통령의 '북핵 및 인권문제' 언급(12.8, 세계정책회의 기조연설 등)에 대해 "부질없는 녀두리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고 실명 거론 원색 비난(12.11,중앙방송·중앙통신)
 - * 대통령의 지난 2일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발언(북한 인권문제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함)에 대해서도 "반공화국 도발로 파멸의 위기에서 헤어나 보려는 가소로운 망동"이라고 비난 (12.11,평양방송)
- 미국에서 연이은 '인권유린행위(백인경찰의 흑인 청년 사살 등) 및 인종차별 혐의시위' 현실은 "인종주의가 뿌리깊은 미국의 사회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의 '北인권문제 제기' 등 조소(12.11,중앙통신·노동신문/살인행위가 합법화 되고 있는 유일한 인권유린국가)

- 북한인권단체(물망초)의 라오스에서 강제 복송된 탈북 청소년들 기자회견(12.12, 평양) 대역 가능성 제기에 대해 '북인권문제를 더욱 여론화하여 국제무대에서 反北 모략소동을 확대하려는 치졸한 추태'라고 반박(12.14, 중앙통신·노동신문/거짓과 모략이 드러난데 대한 앙탈질)
- 남한에서 "인권유린 만행들이 계속 감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北인권문제 제기'는 "신성한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12.14, 중앙통신·노동신문/유신의 후예, 살인마들은 인권을 부르짖지 말라)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